



보도 일시	2022. 2. 17.(목) 10:00	배포 일시	2022. 2. 17.(목) 8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	박철건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웅 (ssuper84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김선영 (ksunny3@korea.kr)

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2년 2월호(‘21.12월 말 기준)

- ◇ 국세수입,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통합재정수지가 ‘21 추경 대비 대폭 개선 전망 (△90.3 → △30조원대 수준)
- ◇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4개월 연속 순유입, 전년 동월 대비 유입세 대폭 확대 (‘21.1월: 0.9조원 → ‘22.1월: 4.3조원)

- **(총수입)** ‘21년 연간 재정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‘21년 2차 추경(514.6조원) 대비 크게 증가한 570조원(잠정) 수준 전망

※ 국세수입 및 재정지출(일반+특별회계) 등은 총세입·세출부 마감시 既 발표(2.11일), 총수입·총지출·재정수지 등은 ‘22.2.9일 기준 잠정치이며, 확정 통계는 ‘22.4월 국가결산 시 발표예정

- ❶ (국세수입)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, 부동산 시장 요인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, 부가세, 소득세 중심으로 ‘21년 2차 추경(314.3조원) 대비 9.5% 증가(+29.8조원)

-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추경예산 대비 각각 4.8조원, 1.9조원 증가

* 영업이익(KOSPI상장, 조원): (‘19) 56.3 → (‘20) 67.5 → (‘21.1~3분기) 81.2
수출(억불): (‘20) 5,125 → (‘21) 6,444 <+25.7%>

** 민간소비(조원): (‘20) 849.1 → (‘21) 879.8 <+3.6%>
수입액(억불): (‘20) 4,676 → (‘21) 6,150 <+31.5%>

- 취업자수 증가,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근로·양도 등 소득세가 추경예산 대비 14.6조원 증가

* 명목임금(전년(동기)대비, %): (‘20) 1.1 → (‘21.1~11월) 4.3

** 취업자(만명): (‘19) 2,712 → (‘20) 2,690 → (‘21) 2,727 <+37만명>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
	추경 (A)	결산 (B)	12월 (C)	12월 (누계) D	진도율		추경 (G)	12월 (H)	12월 (누계) I	진도율 (J=I/G)	12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예산 (J-E)	결산 (J-F)
◇ 국세수입	279.7	285.5	17.7	285.5	102.1	100.0	314.3	20.7	344.1	109.5	2.9	58.5	7.4	9.5
○ 일반회계	271.9	276.3	16.5	276.3	101.6	100.0	304.6	19.1	332.5	109.1	2.6	56.2	7.5	9.1
- 소득세	88.5	93.1	6.7	93.1	105.2	100.0	99.5	7.5	114.1	114.7	0.8	21.0	9.5	14.7
- 법인세	58.5	55.5	1.5	55.5	94.9	100.0	65.5	1.6	70.4	107.4	0.1	14.9	12.5	7.4
- 부가가치세	64.6	64.9	0.8	64.9	100.5	100.0	69.3	1.0	71.2	102.7	0.2	6.3	2.2	2.7
- 교통세	15.5	13.9	1.3	13.9	90.1	100.0	15.7	1.0	16.6	105.8	△0.3	2.7	15.7	5.8
- 관세	7.7	7.1	0.6	7.1	91.5	100.0	8.3	0.7	8.2	98.6	0.0	1.2	7.1	△1.4
- 기타	37.2	41.8	5.7	41.8	112.4	100.0	46.2	7.4	52.0	112.4	1.7	10.2	0.0	12.4
○ 특별회계	7.8	9.3	1.2	9.3	118.3	100.0	9.6	1.6	11.6	120.1	0.4	2.3	1.8	20.1

② (세외수입) 경기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(+0.8조원) 등으로
'21년 2차 추경(29.3조원) 대비 약 +1조원 증가한 30조원 수준 전망

③ (기금수입)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'21년 2차 추경
 (171.0조원) 대비 약 +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 전망

- '21년 빠른 경기회복세, 자산시장 호조세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의 결과,
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(약 40조원)이 예산(19조원) 대비 +21조원 수준 증가

*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(%) : ('20.11) 6.49 → **('21.11) 8.13(+1.64%p)**

** 국민연금기금 적립금(누계, 조원) : ('20.11) 807.3 → **('21.11) 924.1(+116.8조원)**

- 고용회복 등의 영향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국민연금(+3조원) 등
 사회보장기여금 대폭 증가 (2차 추경) 75조원 → (잠정 실적) 78조원 (+3조원 수준)

* 국민연금 가입자 수(소득신고자 기준(만명)) : ('20.10)1,896→ **('21.10)1,909(+13만명)**

** 고용보험 가입자 수(만명) : ('20.12)1,408 → **('21.12)1,451(+43만명)**

< 참고 : 국민연금 수입 실적(잠정치) >

(단위 : 조원)	20년 실적	21년도		
		예산(A)	실적 (잠정, B)	(B-A)
합 계	72	70	94 수준	24 수준
자산운영수익	21	19	40 수준	21 수준
사회보장기여금	51	51	54 수준	3 수준
기 타	0.1	0.1	0.1 수준	-

- **(총지출)** '21년 연간으로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, 방역대응, 경기 뒷받침 결과,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'20년 대비 약 +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(잠정) 추정

<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 >

- **①소상공인 피해 지원 ②고용유지·고용안전망 강화 적극 지원**

①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 강화

-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55만개사 중 **41만개사**(42만개사 신청)에 대해 '22.1.19일부터 '22.2.11일까지 **'21.4/4분기, '22.1/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조원 지급 완료**(업체당 500만원)
- 매출이 감소한 **320만개사**를 대상으로 **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**은 '21.12.27일 지급 개시, '22.2.14일까지 **303만개사에 신속 지급**(3조원)
- **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피해회복** 지원을 위해 '21.11.29일 신청을 시작한 **일상회복 특별용자**(2조원)는 '22.2.14일까지 **2만개사에 0.4조원 지원**
-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의 부담경감 지원을 위해 '21.12~'22.1월까지 **2개월간 76만개사에 대해 전기요금 50%, 산재보험료 30%를 지원**

② 고용유지·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 노력 지속

- '21.12월말까지 **직접일자리 사업**(3.2조원)은 **3.1조원(99.8%) 교부, 3.0조원(95.0%) 지급**, '22.1월말까지 **직접일자리 68.4만명 이상**(연간 목표(105.8명)의 64.6% 수준) **조기채용 완료**
- **구직급여**(12.6조원)는 '21년 한해 **177만명**에 대해 **12조원 지급**(95.5%)

* 구직급여 수급자(만명) ('21.4)73.9 (5)70.4 (6)69.3 (7)67.9 (8)64.7 (9)61.2 (10)56.5 (11)53.7 (12) 52.9

- **(재정수지)** '21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(+29.8조원)·기금수입(약+25조원) 등 총수입 증가로 '21년 2차 추경(△90.3조원) 대비 대폭 개선된 △30조원대 수준 전망

- **(국채시장 동향)**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.4조원(경쟁입찰 기준 13.1조원)

① 1월 국고채 발행은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응찰률은 전년 동월대비 소폭 하락('21.1월: 292 → '22.1월: 277%)하였으나, 외국인·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소화

- 특히,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*는 우리경제 펀더멘털, 높은 수익률 등에 힘입어 1월 중 4.3조원 기록하며, 34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였으며, 전년 동월 대비로도 유입세가 확대('21.1월: 0.9조원 → '22.1월: 4.3조원)

* 外人 원화채 순투자(조원): ('19) +9.7 ('20)+26.5 ('21)+63.9 ('22.1) +3.7

外人 국고채 순투자(조원): ('19)+12.0 ('20)+23.3 ('21)+42.5 ('22.1) +4.3

外人 국고채 보유잔액/비중(조원, %, 기말): ('20)121.6/16.7 ('21)164.1/19.4 ('22.1)168.4/19.6

**② 국고채 금리는 연초부터 대내외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, 추경 국회 논의
경계감 등으로 전년 말 대비 큰 폭 상승**

* 국고채 10년물(기말, %) : ('21.12월) 2.249 ('22.1월) 2.586 (2.14) 2.714(전년말 대비 +47bp)

**③ 정부는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^(1.27일) 이후 추가 국고채 발행분<sup>(정부안
기준 +11.3조원)</sup> 균등발행* 하였으며, 한은도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
2.7일 2조원 규모**의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**

* 2월 국고채 발행규모(경쟁입찰 기준)는 14.5조원으로 1월 계획^(13.0조원) 대비 1.5조원 확대

** 잔존만기 2~9년인 3.5·10·20년물 등 5종목을 2조원 규모로 매입

< 국고채 관련 주요 통계 >

(조원, %)		'21년말	10월	11월	12월	'22.1월
발행잔액		843.7	841.9	848.1	843.7	858.7
발행액		180.5	12.8	10.4	5.8	15.4
평균 조달금리*		1.79	2.18	2.26	2.10	2.31
응찰률(%)		283%	278%	291%	277%	277%
외국인 국고채	보유잔액 (순투자)	164.1 (+42.5)	(+2.3)	(+2.6)	(+4.6)	168.4 (+4.3)
	보유비중(%)	19.4%	18.7%	18.8%	19.4%	19.6%

* '21년 말의 경우 '21년 평균 조달금리, 그 외 월평균 조달금리

□ 안도걸 2차관은 최근 재정동향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

**① '21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수입
증가, 자산시장 호조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에 따른 국민연금의 자산
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,**

- 2차 추경(△90.3조원) 대비 대폭 개선된 △30조원대 수준이 전망되는 등
재정의 선순환이 실현되었다고 평가

**② 금년 상반기 경제 회복세 공고화, 민생안정 및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
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**

- 무엇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상반기 중 63% 조기집행 추진

▪ '22.1.19일부터 '22.2.11일까지 '21.4/4분기, '22.1/4분기 영업시간 제한
조치 대상 중 41만개사에 손실보상 2조원 선지급 완료(업체당 500만원)

▪ 매출 감소 320만개사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(100만원) '21.12.27일 지급
개시, '22.2.14일까지 303만개사에 신속 지급(3조원)

- 방역지원 및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위한 추경예산도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 집행하여, “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” 되도록 총력 경주

- 또한, 한국판 뉴딜, 탄소중립 재정투자,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군도 상반기 적극집행에 만전

* 상반기 목표 집행률 : (한국판뉴딜) 70% <(예산)33.1조원 (집행목표)23조원>
(탄소중립 재정투자) 70% <(예산)11.4조원 (집행목표)8조원>
(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) 55% <(예산)1.2조원 (집행목표)0.7조원>

③ 국채시장의 경우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,

- ①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금년 남은기간 최대한 균등발행하고,
②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^(2.11)에서 발표한 한은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 등이 필요시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 지속 계획임을 밝힘

□ 금번 재정이슈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①지방교육재정 개편방안, 신성장 분야인 ②메타버스, ③고령친화산업, ④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 들의 기고를 게재

①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, 현재 초중등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필요하며, 법정교부율을 경제성장률 및 교육재정수요와 연계하고, 교육 재정 배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개편방안 제시
(기고자 : 김현아 조세연 재정정책연구 실장)

② 가상융합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플랫폼인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므로 이를 실현 하기 위한 ‘기술개발-자금지원-인력양성’ 패키지 재정지원 전략 방안 제시
(기고자 :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산업본부장)

③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하고,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를 통해 글로벌 고령친화산업 시장 선점 및 디지털 케어를 통한 고령층의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비부담 경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
(기고자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단)

④ 의료비 절감,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해 ①디지털 헬스케어 확산, ②병원 디지털 전환, ③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, ④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 등 4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‘22년 2,000억원 규모 재정투자
(기고자 :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)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2월호(배포용)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 박철건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웅 (ssuper84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 김선영 (ksunny3@korea.kr)
	세제실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장 최영전 (044-215-4120)
		담당자	사무관 박병선 (ghibli80@korea.kr)
	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	책임자	과장 김완수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 이해인 (haein85@korea.kr)
	국고국 국채과	책임자	과장 김이한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 최시훈 (choisihoon@korea.kr)

참고

2월호 주요재정이슈 요약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」(붙임)에 게재

①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방안 제언 (조세연 김현아 재정정책연구실장)

- (교육재정 현황) 초중등 학령인구가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, 경제성장 증가에 비례하여 초중등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
 - '72년부터 시행된 '지방교육재정교부금'은 법정지출로 재정수요에 따른 재정배분방식이 아닌 내국세의 일정부분(20.79%)이 연동되어 배분
 - 미래 산업선점, 핵심인재 양성 등 고등교육 투자의 국가적 중요성은 증가하는 반면, 자원기반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비해 약화*
- * '15년 이후 교육분야 예산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가 약 80% 이상 차지하는 반면, 고등교육 비중은 약 15% 내외 수준
- '18년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비중이 초·중등교육은 OECD 36개국 중 1위인 반면, 고등교육은 33위에 불과(OECD 2021)
- (인적자본 투자의 패러다임 변화)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, 저성장 극복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의 근본적 변화 요구
 - 현재 초중등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재정의 구조를 고등교육 등 균형적인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구조로 변화 필요
- (개편방안)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교육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
 - 법정 교부율을 경제성장률 및 교육재정수요와 연계하고, 교육재정 배분 우선순위 결정에 국민, 지자체, 교육부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개편
 - 중장기적으로는,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고, 인구가 증가하는 대도시의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책임성 강화*

*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책임과 재정부담 연계

② 디지털전환 시대 메타버스(Metaverse) 플랫폼의 등장과 재정지원 방향(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연철 디지털콘텐츠산업본부장)

- (메타버스*의 성장) 5G, AI,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융합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
 - * 초월을 의미하는 '메타(Meta)'와 세계를 의미하는 '유니버스(Universe)'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·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·사회·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
 - (비대면 확산)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경제·사회 영역 전반에 비대면이 일상화,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증가
 - (디지털 네이티브 세대*의 등장) ICT 활용과 소비력이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가상세계의 생산과 소비의 핵심주체로 자리매김
 - * 태어날때부터 PC, 인터넷,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을 접한 Z세대(1990년대 중반~2010년대 초반 출생)와 α세대(Z세대에 이어 2011년 이후 출생)
- (현황)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성과 희소성을 부여하는 NFT*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·거래·수익 창출 등 새로운 경제 생태계 형성
 - * NFT(Non-Fungible Token, 대체불가능토큰) : 그림, 동영상, 음악, 게임, 부동산 등 디지털 자산의 진위 판별 및 디지털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
 -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가상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을 통한 수익모델 다변화 모색 등 독자적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점 경쟁 돌입
- (재정지원방향) 메타버스 운용을 위한 주요 기반기술 혁신 등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-자금지원-인력양성 등의 패키지 지원 전략 필요
 - (기술개발) 홀로그램 원천기술 상용화, 5G 환경에서 고수준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바이스 등 핵심 기술 개발
 - (자금지원)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국내 영세 XR 기업*에 메타버스 비즈니스 전환 및 창업·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전문기업 육성
 - * 국내 XR기업 80.5%가 연매출 10억 미만(2020 VR·AR산업 실태조사)
 - (인력양성) 메타버스 전문대학원, 메타버스 랩* 등을 통해 융합형 인재 육성
 - * 석·박사 대상으로 메타버스 특화 기술·솔루션 개발 등 지원

3 고령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추진동향과 시사점 (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단)

- (현황) 고령친화산업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편입과 함께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함에 따라 글로벌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
- (주요국 동향)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등을 추진
 - ① (일본) 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('15~'20)을 통해 고령자의 일상 생활 지원,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증진 투자
 - ② (유럽) 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(AAL JP, '07~'20)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노화, 돌봄 지원 등 건강관리·삶의 질 향상 지원 강화
 - ③ (중국) IT 기술과 양로·의료·금융 등을 융합하는 스마트 양로 모델 개발
- (재정지원 방향)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, 고령친화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 필요
 - 첨단 AI·센싱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
 - 우수역량 보유 고령친화산업체 혁신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* 지원

* 발굴된 아이디어 또는 개발된 기술들이 국내외 특허, 인증 등을 통해 사업화 또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큐베이팅 지원
- (시사점)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로 고령자의 예방적 건강관리가 강화되어 고령자의 삶의 질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 가능
 - 글로벌 고령친화산업 성장가능성을 감안할 때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는 우리의 미래먹거리 등을 위한 新비즈니스 모델로 연계 기대

*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(억불) : ('19) 8,328 → ('25) 10,217 성장 전망(연평균 3.9%)

④ 4차 산업혁명시대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'22년 디지털 헬스케어 재정투자 전략(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)

□ (필요성) 디지털 헬스케어는 ①신성장 동력 창출, ②국민의료비 절감, ③비대면 대응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투자분야로 부상

① (신성장 동력 창출) 방대한 데이터 보유(병원, 전국민 건강보험), 뛰어난 ICT 역량 등으로 연평균 16%씩 성장*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

*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,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'24년 3,920억달러로 증가('17~'24년간 연평균 15.5% 증가)할 것으로 전망

② (의료비 절감) 고령자,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측·예방 의료를 활성화하여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지연·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절감 기대

③ (비대면 사회 선제적 대응)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ICT를 활용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,

- '20년 12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 '심각' 단계인 경우 의료인-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

* '20.2월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이후 약 352만 건의 비대면 진료 실시

□ ('22년 추진전략) ①디지털 헬스케어 확산, ②병원 디지털 전환, ③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, ④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 등 4대 분야 투자 대폭 확대 (1,436.7→2,060.6억원, + 43.4%)

① (디지털 헬스케어 확산)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·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(의료, 건강관리) 서비스를 확산하여 환자 편의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

② (병원 디지털 전환)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

③ (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) 정밀의료 및 4P 의료* 중심 개인 맞춤형 혁신 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생성·수집·공유·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

④ (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) D.N.A(Data, Network, AI) 기반 기술을 헬스케어에 활용하기 위한 R&D 투자 확대